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2. 신용평가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 자	이름	노소영
	담당부서 (과)	공정시장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태현		연락처	02-2100-2682
	과장	이석란		이메일	lemonkuki@korea. 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김태현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2.규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8제4항, 제324조의10제4항제3호의2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제7항제3호, 제335조의15제1항제8호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7.3.10.~4.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신평사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신용정보를 적시제공해야 하나, 발행기업과의 이해관계로 '등급 장사'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지속		
	7.규제내용	① 신평사간 등급담합, ② 신용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의 수취·제공, ③ 특수관계자 신용평가 금지의 우회, ④ 계약체결을 위한 신용등급 이용, ⑤ 서면계약 없이 예상신용등급을 요청인에 제공 등 신평사의 주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 최대 '인가취소'까지 부과 가능하도록 제재수준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신용평가회사('17.2월 현재 4개사)		
	9.기대효과	신평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N)	(N)	(N)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신규 금지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반시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비용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기타	12.일 물 설 정 여부	(N)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335조의11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 또는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청인 등에게 제공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 5.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략) ④ 법 제335조의15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24조의8제4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5.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나 신용평가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u><신설></u>	
4. 5. (생략) ⑤ ~ ⑦ (생략)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신평사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신용정보를 적시 제공해야 하나, 발행 기업과의 이해관계로 등급 인플레이션 소지 상존
 - 발행기업이 우월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후한 신용등급을 주는 신평사를 선택하는 등급쇼핑을 하고,
 - 신평사도 신용등급을 계약 체결에 이용하는 등급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
- ⇒ 발행기업-신평사간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강화하여 등급 인플레이션 소지를 최대한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인 등급장사* 행위를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 * 계약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서면계약 없이 예상신용등급을 기업 등 요청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i) 신평사간 등급담합, ii) 신용평가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의 수취·제공, iii) 특수관계자 신용평가 금지의 우회, iv) 등급장사행위에 대해 인가취소 조치도 가능하도록 제재수준 상향
- ☐ 현행 제재수준(최대 영업정지) 하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적발된 바 있으며,
 - 실제 금감원의 신평사 검사('13.11월~'14.1월) 결과 적발한 영업행위 규제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경제재인 기관경고만 부과되는 등 현행 수준에서는 규제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여 제재수준 상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신용평가사 (한신평, 한기평, NICE신평, 서신평)	방안 마련시 신용평가업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특이사항 없음

3. 기대 효과

☐ 신평사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 →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현행 제재수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대 제재수준을 한 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N	N	N	N	-	N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자본시장의 또다른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모든 위규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보다 높은 수준인 ‘등록취소’ 까지 제재 가능(외감법 제16조)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종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가 신설된 것이 아니고, 제재수준 상향으로 신평사가 위규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제 제재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피규제자 준수 가능

○ 규제 차등화 방안

- ☐ 신평평가회사(現 4개사)의 위규행위에 대해 조치하는 내용으로 규제 차등화 필요성 없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 규제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 규제집행 가능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신평평가업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연구원 등과 TF 구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한 「신평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2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임

* '16.3~9월 중 TF 회의 9회 개최

2. 향후 평가계획

- ☐ 시행 이후 매년 금감원의 신평사 위규행위 상시점검 실시

3. 종합결론

- ☐ 신용평가는 자본시장에서 기업-투자자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중요 인프라인 만큼,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므로 현행 규제 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신용평가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2.규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의2		
	3.위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2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24조의3제5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7.3.10~4.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대주주의 영향력 등으로 인해 신평사의 수익이 재투자되지 않고 배당으로 대부분 유출되고 있으며,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대주주가 등급을 적정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보유함에 따라 등급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 지속		
	7.규제내용	신평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신평사의 공익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등 실질적 심사요건을 추가		
	8. 피 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신용평가회사(신규 인가 신청자 포함) 및 대주주		
	9.기대 효과	부적정한 신용등급 산정에 대한 유인이 높은 대주주의 진입을 차단하고, 사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규율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N)	(N)	(N)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존 신평사의 경우 대주주가 신용등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규제순응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신규 진입희망사의 경우에도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면 되므로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기타	12. 일 물 설 정 여부	(N)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3의2]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p> <p>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p> <p>가. ~ 다. (생략)</p> <p>라.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사실이 경영하려는 업무의 건전한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u><신 설></u></p> <p>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별표 13의2] 대주주의 요건(제324조의3제5항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과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u></p> <p>4) ----- -----.</p>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현재 신평사의 수익은 재투자되지 않고 대부분 배당으로 유출되어 평가품질 제고 등을 위한 혁신노력이 부족

* '15년 순이익 대비 평균배당성향 :

국내 신평사 81.3% > 글로벌 신평사 21.0%

- 또한 영업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평사 대주주가 등급을 적정 수준보다 높게 산정하고자 하는 유인을 보유함에 따라 등급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

- ☐ 그러나,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재무건전성, 채무불이행 및 법규 위반 이력 등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 대주주가 부실평가를 야기하는 등 신용평가의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존재하더라도 규제 가능한 방안이 전무한 상황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기존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대주주 신용의 공익성을 한시하게 해칠 우려 등을 삼할 수 있도록 요건 추가

* 현재 재무건전성, 채무불이행 및 법규위반 이력 등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신용평가사	방안 마련시 신용평가업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특이사항 없음
신평사 대주주 (Moody's 등)	'16.12월 중 대면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특이사항 없음

3. 기대 효과

- ☐ 부적정한 신용등급 산정에 대한 유인을 가진 대주주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차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 대해서도 규율할 수 있는 장치 마련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신용등급의 적정성·적시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N	N	N	N	-	N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 ☐ 저축은행은 대주주 적격심사시 형식적 요건 외 실질적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1)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과징금 등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 은행의 경우, 원칙적으로 10% 이상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10%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적격성 심사시 실질적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그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기존 신평사의 경우 대주주가 신용등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규제순응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 신규 진입사의 경우에도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면 되므로 준수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규제 차등화 방안

- ☐ 모든 신평사(17.2월 현재 4개사)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규제로 규제 차등화 해당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 현재의 신평사 인가 심사업무에서 일부 사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 규제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 현재의 신평사 인가 심사업무에서 일부 사항만을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 규제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 신용평가업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연구원 등과 TF 구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2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임

* '16.3~9월 중 TF 회의 9회 개최

2. 향후 평가계획

- ☐ 개정조항 시행 이후 신규 인가 및 인가 유지요건 심사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으로 활용

3. 종합결론

- ☐ 신용등급 산정 등 신평사의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
 - 투자자에게 정확한 신용정보 적시 제공 및 신용평가의 신뢰도 제고 가능